

NGO SERIES #09



한국 시민운동의 북한인권문제 무관심에 대한 고찰

곽대중

발 간 사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NGO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익숙한 것이 되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만큼 날로 커지고 있다. NGO의 숫자도 급속하게 늘어나서 정부에 등록된 숫자만 해도 3,800여개가 넘고 있다. 언론에서는 NGO 섹션을 따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학계에서도 ‘비영리학회’, ‘NGO학회’ 등 NGO 관련 연구그룹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한국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NGO가 급성장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NGO의 급성장은 한국사회의 강한 활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에너지가 NGO의 양적 팽창에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NGO의 질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학계의 노력이다. 최근 들어 NGO 관련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NGO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NGO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선언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NGO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의 현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찬반양론이 경쟁하는 가운데 정교한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기업원에서는 한국의 NGO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NGO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양적으로 급팽창한 NGO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한편 살려나가야 할 장점들을 옹호함으로써 NGO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가 NG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언론인, 일반인들에게 토론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6월

자유기업원장 민병균

훑어보기

김대중 정부 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북한의 급속한 붕괴는 남한의 입장에서 결코 이롭지 않으니 북한을 경제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개혁 개방의 길에 이끌어냄으로써 체제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전망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깔고 있지만 애초에 전제부터 잘못 되었다. 김정일 정권은 현 북한사회의 비극을 만들어낸 정치적 책임 때문에 개혁 개방의 길에 나설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경제개방이야 할 수 있겠지만 사회가 발전하려면 전면적 개방이 필수적인데 대외 정보가 물밀듯 들어와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면 김정일 정권은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북한 체제와 정권은 어느 순간 급속히 붕괴될 것이라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준비를 갖춰놓아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은 북한문제의 복잡한 전개양상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앞장서 북한정권과 체제붕괴를 노골적으로 시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민주화운동은 북한체제와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운동이다.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주장을 정부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시민운동은 그에 개의치 않고 원칙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운동단체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체제의 비민주성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사의한 침묵의 행렬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권위적인 정부와 맞서 싸우며 성장했던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나아가 북한 인권·민주화운동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모두 극우 혹은 맹목적 반공으로 여기는 경향,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적 태도, △민족주의적 성향 등으로 인해 북한인권문제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북한을 비판하게 되면 우익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자기 세력의 유지를 위해 명백한 반인권·비민주에 침묵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죄악이다. 또한 북한사회는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상상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며 민족주의의 탈을 쓰고 있으나 진정한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있지도 않다. 북한 사회는 수령의 1인 지배로 유지되는 절대주의 사회이며, 북한이 이야기하는 민족은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새로운 민족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민족주의는 통일전선전술의 한 방편일 뿐이다.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현 북한 체제를 옹호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무장 불가피론, △미국의 경제봉쇄론을 내세우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불신한다. 북한이 막대한 예산을 계속 쏟아 부어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자주국방’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물이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힘만으로 안보를 지키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현명한 생존전략을 구사했다면 인접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 된다. 하지만 북한은 내내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뒤늦게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현재 북한의 ‘군사우선주의’는 실제 국방력을 통해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도 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미국의 경제봉쇄 탓이라는 주장은 심대한 지적 사기이다.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은 중국,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별 구속력이 없으며 유럽이나 중동의 국가들도 크게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외경제교류가 많지 않았던 것은 폐쇄적이며 낙후한 경제체제와 대외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봉쇄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입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이유로 북한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진보 시민운동 단체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출하였으니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라며 탈북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으려 하지만 탈북자들은 북한의 지극한 일반인들이다. 또한 남한에 이미 입국한 탈북자가 6,000여 명을 헤아린다. 이들의 북한에서의 직업, 나이, 거주지, 계층, 성향은 다양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게 내놓는 주장을 믿지 않고 그것이 조작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진보 시민운동 단체들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경청하여야 하며 참혹한 북한의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북한 인권·민주화운동에 있어서는 △현재 북한의 몰락을 김정일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가 △북한인권운동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운동인가 △북한 인권·민주화를 위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는가 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김정일의 집권기는 최소 20년에서 최대한 30년까지 늘어볼 수 있다. 현재 북한 사회의 여러 질서와 체제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김정일이다. 따라서 김정일을 제거하여야만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북한 인권·민주화운동은 곧 ‘김정일 퇴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체제붕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여느 민주주의 사회와 같은 ‘소수자의 권리’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제반 인권문제는 살인적 체제와 정권의 문제에서 발생했으며, 필연적으로 북한 정권·체제 변혁운동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극히 열악해 내부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부의 지원은 절실하다. 북한 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많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내부에 잠재된 민주화운동 세력은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다양한 선전활동, 국제연대활동, 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 북한 인권·민주화운동으로 할 일은 많다. 남한은 북한과의 혈연·언어상의 유대감, 경제적 우월성, 민주화 운동 경험 세대의 존재 등의 이유로 인해 북한 인권·민주화운동의 든

든한 지원기지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 인권·민주화운동 단체로는 △북한인권개선에 중심을 둔 북한인권시민연합, 좋은 벗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북한체제변혁에 중심을 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기타 탈북자단체 및 선교단체, 납북자 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 내 민주화운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 재중 탈북자 보호 및 지원, 남한 입국 탈북자 적응 지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활동, 조사보고 활동, 각종 캠페인 및 대중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보 시민운동 단체들은 그 배후에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민주화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인간과 함께 한다는 진보운동의 순리에 맞는 행동이다.

목차

발간사	2
훑어보기	3
I. 들어가며	8
1-1. ‘북한 붕괴’의 미래	8
1-2. 한국 시민운동의 북한문제에 대한 침묵	10
II. 한국 진보 시민운동단체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과 진단	13
2-1. 무관심에서 ‘방해’로의 진화, 혹은 퇴화	13
2-2.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은 왜 북한인권문제에 무관심한가?	16
III. 북한문제에 대한 몇 가지 논점	24
3-1. 북한의 군사적 무장 불가피론	24
3-2. 미국의 경제봉쇄론	27
3-3. 탈북자 증언에 대한 불신	31
IV.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37
4-1. 북한문제의 본질적인 책임자는 김정일	37
4-2. 북한인권과 체제변혁 문제는 구별될 수 있나?	39
4-3. 하지 않으려니 문제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40
4-4. 남한은 북한인권 · 민주화운동의 지원기지	42

V. 북한인권 · 민주화운동단체 소개	44
5-1. 북한인권개선 중심	44
5-2. 북한체제변혁 중심	47
5-3. 탈북자단체	49
5-4. 북한선교단체	50
5-5. 납북자 관련단체	51
 VI. 글을 맺으며 : 진정한 국제주의자, 진보주의자를 기다린다	55

I. 들어가며

특히 한국에 관해서는, 오직 한국에만 해당되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형태야 어떻게 되든간에, 북한의 사회와 경제를 재건하고 재창조하는 일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건박하고도 피할 수 없는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 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 한국어판 서문에서

1-1. ‘북한 붕괴’의 미래

향후 10년 이내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예측 가능한 사건, 나아가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당연히 ‘북한의 변화’이다. 일단 상정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북한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른바 레짐(regime) 체인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체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지도층만 덜 폭압적인 인물들로 교체되는, 이른바 리더십(leadership) 체인지다. 하여간 어느 방향으로든 북한의 체제와 정권은 교체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입각에서는 북한의 현 체제와 정권하에서 개혁 개방과 점진적 민주화,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우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대체로 이러한 입장에 서왔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보려는 연착륙(軟着陸)의 의도라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우선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견해는 대개 중국의 성공으로부터 ‘북한도 그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입각해 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북한과 중국은 엄연히 다르다. 사실 중국조차도 지난 20년간 추진되어온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차분한 연착륙을 해왔지만, 1당 독재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붕괴한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볼 때 정치체제는 경착륙(硬着陸)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중국이 이러할진대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체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개혁 개방만을 놓고 보자면,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김정일 정권은 이미 개혁 개방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개혁 개방 없이 난국을 타개하기가 어렵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정치적 취약점 때문에 개혁 개방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갈 수 없는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체제와 정권이 위협받지 않는 조건 안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려 한다. ‘한 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런 딜레

마 때문에 김정일식(式) 개혁 개방은 일진일퇴를 거듭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제한된 개혁 개방은 단기적 해갈책(解渴策)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북한 내부와 외부의 기대를 장기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와 정권의 근원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가 10년 내에 이루어질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구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보다 북한의 몰락 가능성은 훨씬 더 예측하기 쉽고, 북한의 몰락이 북한 내부 뿐 아니라 남한, 나아가 동북아(東北亞)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쉽게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구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급격히, 도미노 식으로 붕괴할 것이라 예측한 전문가들 많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붕괴는 벼락처럼 갑작스레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진실은 봄날의 들풀처럼 파릇하게 고개를 내밀 것이다.

북한의 붕괴는 축복이자 재앙이다. 현 북한체제·정권의 붕괴는 곧 북한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현 북한체제·정권의 붕괴는 북한 내부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며, 따라서 ‘북한 붕괴 = 민주화 =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지금껏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정도의 혼란은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일시적 혼란’일 것이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자그마치 반세기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정권 치하에 살았던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혼란은 혼란이 아니라 축복 차제다.

역으로 북한의 붕괴는, ‘재앙’이라는 표현이 썩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한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게 될 남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비용’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일시에 남한으로 몰려들었을 때 발생하게 될 사회 문화적 혼란 역시 극심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한 사람들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며, 북한의 붕괴 이후로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재건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하여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남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배경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남한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준비를 갖춰놓아야 한다. 북한의 붕괴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어차피 받아 안을 부담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위성’의 차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준다는 박애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남한만의 이기적인 관점에 서더라도 북한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10년 후가 아니라, 최소한 20~30년 동안

북한문제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4, 5 순위, 아니 그보다 훨씬 뒤쳐진 사각지대에 있다. 당장 피부로 와 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2. 한국 시민운동의 북한문제에 대한 침묵

물론 북한문제 해결의 1차적 주체는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문제의 핵심은, 집권 반세기를 통해 이미 무능과 부패, 반(反)민주성을 여실히 증명해 보인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정권을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는 집회·결사·언론·출판 등 일체의 정치적 자유가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문제는 북한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그가 북한의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인 자세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동포로 생각하면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남한 사람들, 나아가 북한문제 해결로 인한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게 될 남한 사람들이 ‘북한문제는 북한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방치해두는 것과 같다.

북한문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얹혀있다. 북한의 식량난, 핵 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 미국-북한간의 대립, 미국-중국간의 손익타산, 북한의 대남적화전전략과 이로 인한 남한 내부의 갈등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일단 굶주리는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남한이 사회주의화(社會主義化) 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며 “지금 북한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북한 인권·민주화의 목소리는 도외시되거나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햇볕정책 - 평화변영정책으로 이어지는 대북유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문제의 복잡한 전개양상에 비추어볼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을 통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우선 구제토록 하고, 위기의 벼랑 끝에 놓인 북한 정권이 만에 하나 저지르지 모르는 무분별한 도발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이렇듯 전술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가질 수는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북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혹은 무엇 때문인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전략적 목표가 사라지고 북한 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른바 ‘남남(南南)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국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책에서는 논외로 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시민운동단체(NGO)까지 이러한 정책에 가세하고 나아가 부추기는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시민운동단체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대(對)정부 차원에서 보면 대체로 정부의 활동을 감시·견제하고 정부가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맡아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시민운동단체들은 대부분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대북유화정책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인권문제, 정권 및 체제의 민주화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구성원들이 북한 정권을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논의의 방향이 약간 달라진다. 그렇다면 그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유화책이 북한 정권을 더욱 지지·용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활동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개선하자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들이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알려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려 하는데 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 정권 및 체제 민주화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한국의 시민운동단체는 문민정부가 등장하여 장기간의 군사정권 아래 지속되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약화된 199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결성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과거 남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흐름에 맞춰 한국 사회의 개혁 이슈를 다양화하자는 뜻을 갖고 출발했다. 따라서 남한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과 의무감이 높아졌음에도 이른바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여전히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의 인권·민주화를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북한인권·민주화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활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한 이들의 이러한 침묵의 원인을 짚어보고 그 이율배반적인 논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해서 시민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소개함으로써 대안으로 삼고자 한다.

필자는 여기서 북한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북한인권·민주화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한체제와 정권의 근원적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한 사회에 적용하는 엄격한 잣대의 십분의 일이라도 북한의 인권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定常)이고 균형감각에 맞는 행동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불가사의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외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더라도, 북한 주민들 자체의 힘으로 언젠가는 북한은 변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시민단체들의 태도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적극적인 민주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고, 소극적인 민주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의지를 꺾는 일이며, 이런 문제에 관해 별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민주적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한국 시민운동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훗날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시민운동단체들을 향해 이러한 원망의 말을 내던질지도 모른다. ‘대체 그때 당신들은 어디서 뭘 했느냐’고. 그러한 미래가 펼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시작한다.

II. 한국 진보 시민운동단체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과 진단

2-1. 무관심에서 ‘방해’로의 진화, 혹은 퇴화

한국의 시민운동단체는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여 지금은 ‘NGO 권력’, ‘제4의 권력’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6년과 1999년 ‘시민의 신문’이 조사하여 그 이듬해에 펴낸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따르면 1996년 말 한국의 민간단체는 약 3,800개(지부 포함 1만여 개), 1999년 말에는 6,800개(지부포함 2만여 개)에 달했다. 불과 3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¹⁾ 2003년판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따르면 조사된 단체는 총 2만 5,000여 개, 총람에 수록된 단체는 1만 5,180개로, 이들은 다시 시민운동단체 3,937개, 직능·사회단체 4,243개, 기초조사단체 3,500개, 재외동포단체 3,500개로 분류되었다. 시민운동단체 가운데 63.69%는 1990년 이후에 설립(1990년대 49.44%, 2000~2002년 14.25%)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현재 약 4,000개에 달하는 시민운동단체는 여성, 환경, 경제, 인권, 평화, 문화, 교육, 복지, 언론, 종교, 해외, 장애인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총선(總選)연대’, ‘통일연대’ 등으로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술한 시민운동단체 가운데 북한인권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단체는 손으로 꼽을만한 정도다. 북한문제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 가운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모르겠으나 상황과 전망이 그렇지 아니한데도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단체는 그 세력이 미미하며, 부문 시민운동단체들이 자신의 고유영역을 벗어나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시민운동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월권행위(?)를 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진보 시민운동단체로 분류되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무관심의 정도가 심하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 시민운동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창립 이래 정치개혁, 경제개혁, 조세개혁, 평화군축, 생명·과학기술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경제개혁센터,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조세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사회복지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활동기구를 두고 있지만 2004년 6월 현재까지 10년에 이르도록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의 조사활동이나 입장 발표도 한 적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문제를 주요한 활동영역으로 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²⁾ 인권운동사랑방이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

1)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창호, 중앙일보 기획 “시민단체 어디로 가야하나” - 우후죽순 늘어난 시민단체(2001년 12월 2일자)에서 인용. 시민단체는 1999년 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을 전후하여 그 수가 크게 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환경운동연합이라고 북한문제를 무관한 것이 아니다. 2002년 2월 북한은 김정일의 60회 생일을 맞아 금강산 바리봉에 글자당 높이

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1993년 창립 이래 10여 년 동안 보호감호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테러방지법 문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인권의 전지에서 접근하였음에도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운동단체들이 2004년 들어 갑자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3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통일연대 학술위원회, 민주화를 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대표적 시민운동단체들은 ‘NK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NK자유법안’이란 2003년 11월 미 의회에 상정된 ‘North Korea Freedom Acts’(북한자유법안)을 말하는 것으로, 법안의 목적(sec4) 조항은 △한반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대량살상무기, 그 무기와 관련된 유통구조, 재료, 기술의 발전, 판매, 이동의 종료 △민주적 정부 아래 한반도의 통일 지원 △유엔 협약에 따른 북한의 인권존중과 보호를 성취하고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는 데 따른 지원방안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자유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북한 난민보호를 위한 활동 △북한의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활동 △북한과의 협상 원칙 △기타 조항 등 크게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및 탈북자, 종교적 박해에 대한 조사보고활동,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북한 난민에 대한 우선 망명 정책 실시, 북한 어린이를 미국으로 입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북한인의 미국내 신분보장,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북한으로의 라디오 방송 확대 및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배포, 북한의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대량살상 무기 및 인권문제 결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공평한 배분여부 확인,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마약·무기 판매, 인신매매 등 범죄활동에 대한 미국 대통령 직속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시민운동단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이라는 의견

30m, 깊이 2m로 ‘천출명장 김정일’을 새겨 넣었다(이 바위에 새겨진 글씨는 2004년 4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9차 남북이산가족상봉에서 남측 행사관계자가 “‘천출(天出)’의 의미가 남에서는 ‘천출(賤出)’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발언하여 행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른바 구호바위, 자연바위 글밭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자연훼손 행위는 북한 땅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은 묘향산과 금강산에 각각 글자당 3m, 8m의 크기로 새겨져 있고, 백두산 향도봉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라는 김정일의 글씨가 산 하나를 가득 메울 정도로 양각(陽刻)되어 있다. 금강산 옥녀봉 정상에는 “금강산은 조선의 기상입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이, 만수봉에는 “주체의 향토성 김정일”, 세존봉에는 “금강산은 천하절승, 김정일”이 새겨져 있다. 또한 구월산에는 “서해명승 구월산 김정일”이, 칠보산에는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새겨져 있다. 이밖에도 북한의 명승지에는 약 5,000여 자로 추산되는 우상화 글귀가 새겨져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글밭을 새기는 데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글의 내용이 세상에 발표된 날짜를 새겨 넣고 △크기와 필체를 대규모로 하고 △글씨체는 청봉체로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주위의 색깔을 고려해 새기라고 되어 있다. 환경운동단체는 이러한 북한의 명백한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굳이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환경운동단체는 그 어떤 시민운동단체보다 앞장서 반대해야 마땅한데, 한국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반대할 때는 사력을 다하면서 정작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서를 채택하였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무척 염려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법안 2장의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망명 허용’ 방침이 북한 사회 내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탈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것으로 식량난에 대한 개선 없이 난민촌 건설이나 기획망명 등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3장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 24시간으로 연장하고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협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반대하며, 법안 4장 북-미 협상에 인권 의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진보 시민운동단체³⁾들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뒤에 논하기로 한다. 여하튼 이들은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그에 대한 첫 제기를 한다는 것이, 미국이 북한인권문제에 관련해 법안을 제출하니 이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들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제59차(2003년), 제60차(2004년)회의에 연달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특별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의 인권헌장을 준수하고 인권현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3년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자 2004년에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 porteur)’을 임명하게 하는 등 실천적인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4~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국 대표들을 면담하며 북한의 인권현실을 알리고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표결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이에 반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 10명 내외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방해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2004년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은 채택되었다.⁴⁾

3) 흔히 자칭 타칭으로 ‘진보 단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내용이 과연 진보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좌파 시민운동단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는 편의상 일반적인 호칭인 ‘진보 시민운동단체’라 한다.

4) 유엔인권위원회는 53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199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는 제59차 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권하였고, 제60차 회의에는 아예 기권표를 던졌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과 관련 2003년에는 “정치적 실리 때문”, 2004년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공색한 답변을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현장접근을 허용할 것 △유엔의 각종 인권관련 규약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가입할 것 △식량배급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 등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게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유엔인권규약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대단히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유엔인권위에서 계속 눈총받는 행동만 하다가 결국에는 특별결의안 채택을 자초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는 것은 당연

금기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는 탈북자들의 인터넷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중단을 요구하며 자유북한방송의 녹음실이 위치한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유북한방송은 전 인민군 선전작가인 탈북자 김성민 등이 주도하여 제작하는 방송으로 탈북자 수기, 북한의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 남북관계 뉴스 및 논평, 최근 북한 소식 등의 내용을 담아 하루 1시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방송된다. 이러한 방송에 대해 통일연대는 “6·15 공동선언을 훼손하고 남북화해와 남북합의를 무시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통일조국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서 북측을 비방하는 따위의 방송이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위협적인 어조로 방송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자유북한방송이 북한의 어떠한 진상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는 단지 북한을 비판하기만 해도 ‘비방’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인 것일까. 통일연대에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이 총망라하다시피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참관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통일연대의 작은 집회 등으로 인해 자유북한방송이 입주해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난색을 표하자 결국 방송국은 녹음실을 다른 곳으로 두 번이나 옮겨야 했다.

이렇듯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침묵에서 반격으로, 나아가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방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이 북한인권 침묵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인내의 한도를 넘은 듯한 느낌마저 있다.

2-2.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은 왜 북한인권문제에 무관심한가?

그럼 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원인과 배경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반공주의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모두 극우(極右) 혹은 맹목적 반공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이고, 둘째 북한을 사회주의 사회라 믿고 ‘남한의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듯 북한의 사회주의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두둔하는 경향 때문이며, 셋째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좌파들만의 특성 때문이다.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 비단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 왜 일반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무관심한지 살펴보도록 하자.⁵⁾

히 남한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 그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용을 얻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정치적 실리, 평화정착 등을 운운하며 기권함으로써 ‘인권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결부시키는 나라’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얻게 되었다.

5) 이하 내용은 “왜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한가?”(시대정신, 2002년 1~2월호)를 보완, 인용하였다.

2-2-1. 반공주의의 부정적 영향

지난 냉전시기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지배해 왔던 것은 반공주의⁶⁾이다. 일반적으로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지향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반공’은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전쟁을 겪었고, 그들의 재침(再侵)을 방어하고 체제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시대적 목표 때문에 다른 민주주의 사회의 그것보다 공격적 의미를 담게 되었다.

안타까운 역사의 상처이지만 해방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계급투쟁’, ‘인민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좌익(左翼)의 학살과 테러·공포정치는, 공산주의 역시 애초에는 자유주의 등의 이념과 마찬가지로 사회진보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려 했던 이상주의적 열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표방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까지를 대화와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암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해 왔다. 그 역사적 배경으로는, 첫째 해방 이후 좌우 대치 정국과 한국전쟁 등을 통해 몸으로 느끼게 된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을 목격했던 체험적 이유, 둘째 우리 사회에서 근대적인 민주주의 사상이 인식되지 오래되지 않아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는 점, 셋째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집권세력이 통치의 편의를 위해 반공주의를 국민통합과 반대파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결과만을 놓고 볼때 한국의 반공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냉전시기 역대정권들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공산주의 = 절대 악, 공산주의자 = 늑대 ≠ 인간’과 같은 단순한 도식으로 국민들을 교육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일반대중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매우 단순하고 비이성적인 상태에 머물게 했고 공산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마저 어렵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공주의는 지난 30여 년간의 산업화와 민주화운동 흐름 속에서 사상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대중의 자각이 높아지고, 또 맑스주의가 우리 사회의 이념생산을 담당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면서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극우적인 반공주의의 지적 해게모니는 무너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새로운 세대의 진보파 지식인들은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들은 대체로 반공주의에 대항하며 자신들의 비판적 의식을 형성해 왔다. 이로 인해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반공주의의 폐해에 대한 인식과 피해의식으로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입장을 극우 반공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6)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복잡한 논의를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수백 또는 수천 가지가 될 것이므로 이들 경향을 모두 ‘반공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만 반공을 ‘사상과 양심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원칙보다 상위에 두는 극우적 사고경향만을 ‘반공주의’라고 표현할 것이다.

는 북한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그 근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메카시즘적 반공주의의 악몽을 상기시키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 중 다수는 북한 인권현실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명백한 김정일 체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북한 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을 모두 극우로 규정하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만일 이런 식의 입장이 옳다면 냉전시대에 소련의 인권유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서구의 모든 자유주의자, 반스탈린주의적 맑시스트, 사민주의자 등도 다 ‘극우’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인물과 사상』 2000년 12월호에 실린 홍세화의 글 ‘어떤 프렌치 커넥션 2’는 이런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에서 홍세화는 프랑스의 북한인권운동가인 피에르 리굴로가 한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은 여기서 논할 내용이 아니고, 글에서 홍세화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북한현실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며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어떤 인도주의 구호기관 사람이 북한 인권현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을 그 한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홍세화는 세계적인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영국의 ‘OXFAM’이나 1999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국경없는 의사회’, 프랑스의 구호단체 ‘기아추방 행동(ACF)’ 등이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극심한 방해에 분노하여 북한 당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서 철수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국제인권협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해 전세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국 정상들의 동참을 호소한 사실도 무시하고 있다.⁷⁾ 2000년 5월 17일에 프랑스의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억압체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인 「뤼마니떼」에 발표한 사실도 물론 무시되고 있다.

일부 지식인들의 이러한 사고경향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의 지식인다움을 규정하는 근본 조건 중 하나가 개인의 경험에 의해 왜곡된 주관적 잣대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척도를 사물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이성적 사유능력에 있다면, 우리 사회나 개인의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함몰되어 2,000만 명의 인간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침묵하거나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태도를 지식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⁸⁾에 대해 침묵하느냐 발언하느냐는 인간의 보편적 양

7) <북한에 대한 침묵을 깨자>라는 제하의 이 성명은 2000년 2월 2일자 「리베라시옹」에 실렸다. 「리베라시옹」은 극우파의 매체가 아니라 생전에 일관되게 좌파적 입장을 취했던 샤르트르에 의해 창간된 신문이다. 「리베라시옹」은 2001년 4월에 로맹 프랑클린 기자가 취재한 북한 실상을 ‘거대한 거짓말의 나라에서’라는 제목의 르포르 게재한 적이 있다.

8) 일반 인민에 대한 살육(殺戮), 집단살해, 노예적 혹사, 추방 등의 비인도적 행위나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를 한 죄를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있었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UN 국제법위원회의 1950년의 보고에서 국제법상의 범죄로

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모두를 극우파로 모는 것도 사실에 어긋나지만 백보 양보해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극우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게 강하다면 그럴수록 진보주의자들이 먼저 나서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벗이 남한의 진보파가 아니고 극우파라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발언하게 될 때 한국 진보주의는 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일부의 진보파 지식인들은 아직도 남한 사회에서 보수우익 이데올로기가 강고한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 대한 비판은 극우세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북한 인권문제 거론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극우세력에 이용당하므로 북한체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북한 공산당에 이용당하므로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안 된다’던 논리의 복제판이며, 남한 내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북한 주민의 처지를 무시하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기저에는 남한내 진보파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쯤은 희생시켜도 좋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셈이다.

기독교의 성서에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진 유태인을 보고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간 반면 유태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해주었다는 예화가 나온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참된 이웃이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다. 남한의 극우세력을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는 본래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간에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이 그냥 지나쳐간 ‘착한 사람들’보다는 더욱 선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자신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향해 ‘당신은 본래 악한 사람이니 사람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외쳐대고만 있는 사람을 누가 믿겠는가?

2-2-2. 사회주의에 호의적인 진보지식인들의 지적 경향

지난 수십 년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남한 사회에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진보주의 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1990년대 들어 우리 사회 지식계층 사이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현실에 대한 대안모색 과정에서 맑스주의 또는 그 밖의 사회주의적 사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매우 많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에 비판적이고 사회주의에 호의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경향이 상대적으로 남한 사회에 대해 엄격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해 온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갖게 한 한 요인이 된 것은

규정되었다. 나치 재판의 법적 근거가 됐던 뉘른베르크 재판소 헌장은 6조에서 반인도 범죄를 “전전 또는 전후 모든 민간인에게 행해진 살인, 섬멸, 노예화, 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틀림없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라고 믿고, 비록 그 사회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남한의 경우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덮어주고 남한이 북한의 현 독재권력을 도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북한 사회에는 남한 사회에는 없는 장점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⁹⁾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남북 양 체제가 서로 존중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그 본뜻과는 관계없이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인¹⁰⁾ 북한체제의 존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한보다 훨씬 철저하게 위계화 되어 있고 신분간의 유동성도 극히 작은 북한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북한이 맑스가 말한 사회주의 사회와 비슷한 점은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집산(集産)주의 체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령숭배와 결합하여 주민에 대한 무시무시한 억압적 독재를 뒷받침하는 지주로 되고 있다. 오죽하면 프랑스의 공산주의자들이 성명에서 ‘북한 사회를 공산주의와 동류로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이 체제 스스로도 감히 공산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했겠는가?

이런 조건에서 스스로를 좌파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정일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은 것이다. 애초에 자본주의를 비판한 동기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려는데 있었다면 북한 사회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 가운데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해 보편적 잣대를 가지고 진지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극히 어렵다.

남한 좌파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 극우 반공주의의 정반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남북자 귀환문제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말자’고 주장하거나 언급을 회피하는 경

9)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존경을 받고 있는 노학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가 선입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남한 사회가 잃어버렸거나 업신여기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그쪽에서는 애써서 가꾸고, 간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조금 단 순화해서 말하면 물질적으로 우월하고 종교를 자랑하는 남한 사회는 ‘인간의 물질화’ 경향이 심화되는 반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종교가 없는 북한은 불교적으로 무소유의 제도와 평등의 이념으로써 ‘인간의 종교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이영희, 「통일의 도덕성」, 『당대비평』, 1998년 봄호, p.147.

북한 사회가 ‘인간의 종교화’를 지향한다는 말은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종교’는 보편적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라 권력자를 신의 지위에 올려놓고 그 밖의 모든 인간을 노예화하는 비인도적 종교이다. 수령이 모든 것을 독점하며 또 철저한 신분제로 위계화된 사회를 어떻게 ‘무소유의 제도와 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10)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인 북한체제’라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필자는 거리에서 사람을 화형에 처하며, 정치적 반대자는 물론이고 반대자가 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들까지도 그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사회, 주민들은 굶주림 때문에 인육(人肉)을 먹을 처지가 되어도 죽은 통치자의 시체를 보존하는 데 천문학적 인 자금을 쓰는 사회에 대해 어떤 다른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1995년 7월 7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뉴스는 “러시아인 기술자 7인에 의하여 (김일성의) 사체보존 작업이 완료되었다. 100만 달러가 소요되었지만 이후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보도했는데, 그 후에도 사체관리를 위해 연간 80만 달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 생전에 김일성이 일하던 주석궁을 묘지인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전환하는 데 든 돈은 8억 9,000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우가 그렇다. 북한 인권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들을 모욕하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¹¹⁾ 그들이 겪은 인간적 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단 말인가?

과거 냉전시대에 남한의 극우파들은 같은 우파의 인권만 인정하고 좌파의 인권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날에 와서 남한의 좌파가 좌파 아닌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극우파에 비해 나은 점이 무엇인가? 참다운 진보주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잣대는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인간존엄의 보편성에 대한 신념이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좌우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인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2-2-3. 남한 진보주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적 성향

서구에서 민족주의가 진보주의와 대척점에 서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진보파에 끼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모든 진보파 지식인들이 민족주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진보파 지식인들 사이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좌파는 일제시대부터 오랜 세월을 걸쳐 ‘민족적 이익’의 실현을 자기 운동의 중심과제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많은 남한의 좌파 지식인들이 본래 좌파이념과는 대립되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고 여기에 이끌려 왔다. 그 결과 남북관계의 문제도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간다는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민족통일’이나 ‘민족자주’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민족주의 의식은 북한과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독재자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시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 문제가 많은 적든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민족적 대단결’을 위해 북한의 문제점을 덮어주고 무조건 함께 힘을 합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의 힘’이나 또는 ‘민족의 영광’과 같은 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처지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주의자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민족통일’, ‘민족자주’ 같은 것의 하위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족국가 건설’이란 목표가 어떻게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에 침묵을 지키는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일본 군국주의와 독일 나치즘의 범죄가 ‘민족’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 상위에 놓는 논리에 의해 정당화됐다면, 김정일의 ‘민족대단결론’ 역시 자기의 범죄적 학정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김정일의 수령숭배 논리가 과거 일본의 천황숭배 논리와 커다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

11) 정치범 수용소 생활후 탈북한 강철환 씨에 대한 홍세화 씨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라(같은 책, p.76).

다.¹²⁾ 그러나 남한의 진보파 지식인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북한 정권 역시 남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잘 알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 북한은 아예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한-미 동맹관계의 청산을 남측에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북한의 선군(先軍)정치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고 있으니 남한은 이에 감사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고¹³⁾ 나아가 “친북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이 있고 반미에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를 지키는 길이 있다”고 친북반미를 선동하고 있다.¹⁴⁾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민족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민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평양방송은 1995년 1월 18일 “오늘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민족이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조선”이라고 주장했으며, 노동신문(1995.3.27)과 조선중앙방송(1995.4.14)도 연달아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을 ‘태양민족’이라 하고 김일성의 출생년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¹⁵⁾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 부르고 있다. 1996년부터는 ‘김정일 민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황하 문명과 함께 ‘대동강 문명’을 추가하여 이를 ‘세계 5대문명의 발상지’라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웃지 못할 촌극 또한 벌어지고 있다.

각설하고, 북한 정권이 말하는 ‘민족’과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개념은 이렇듯 완전히 다르다. 북한에서 민족이란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존재로서의 민족이며, 민족의 단결이란 김정일의 지배 아래 귀속되는 단결을 의미한다. 북한이 공개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개념을 누차 소개하고 있음에도 남한의 진보 인사들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의 허구적 구호인 ‘우리민족끼리’라는 전술에 호응해 주고 있다.

12)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그의 유명한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라는 글에서 전쟁 전 일본의 천황제 아래에 서는 “모든 국가질서가 절대적 가치체인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연쇄적으로 구성되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지배의 근거가 천황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마루야마 마사오,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김석근 역, 한길사, p.59).

13) 노동신문 논설, 2002년 12월 1일자.

14)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2004년 9월 28일자.

15) 북한식 연호법으로 2005년은 ‘주체 94년’이다.

III. 북한문제에 대한 몇 가지 논점

3-1. 북한의 군사적 무장 불가피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의 공식적 입장은 찾기 어렵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석상에서의 발언이나 인터넷 논쟁, 그간의 활동내용 등을 통해 대략적인 사고의 흐름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 단체는 거의 없다. 진보 시민운동단체 가운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곳은 ‘평화네트워크’이다. 1999년 창립한 평화네트워크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NMD/TMD(전역미사일방어체계) 계획 철회, NLL(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 등 평화 군축(軍縮)을 전문 이슈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 산하에는 ‘북한인권특별팀’이 구성되어 운영중이다. 그동안 이 단체의 북한인권특별팀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단체의 특수한 성격 때문인지 평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문제를 ‘전쟁과 평화’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면 한반도에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의 위험을 높이게 되니 그보다는 평화군축운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보고서 7편 가운데 북한의 인권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논하면서 정작 북한의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와 소개는 없다니 도대체 이런 엉뚱한 보고서가 어디 있을까. 이것은 평화네트워크뿐 아니라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의 일반적 특징이다.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NK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에서도 대체 북한의 인권상황이 어떻기에 미국이 북한자유법안까지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없이 그저 미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만 높았다. 북한자유법안을 반대한다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미국이 참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당연한 수순 아닌가. 그런데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의 북한인권·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판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진단은 빠진, 속된 말로 ‘앙꼬 없는 찐빵’을 보는 느낌이다. 현실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운동은 늘 관념의 안개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다. 평화네트워크 북한인권특별팀 소속 하정호가 쓴 “몽매한 장님은 더 이상 대중을 오도(誤導)하지 말라”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북한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내부결속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준전시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한미연합군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군사강국화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이라크, 수단,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의 침공을 받아 벌써 붕괴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94년의 전쟁위기에서 북한을 구한 것도 북한이 지닌 군사력이었다. (중략) 작년 6월 16일, 미사일 협상을 평화협정과 연계하여 처리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애써 무시하고, 미국은 대북

강경노선만을 고집하였다. 이때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 중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미군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쯤되면 긴장을 조장하고 전쟁위협을 벌이는 세력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난 50여 년의 분단시기 내내 북한은 흡수통합의 위협에 시달려 왔다. 한미동맹체제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흡수통합의 실체인 것이며,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로 북한에 대한 위협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다음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겨레전국독자주주모임 등이 가입단체로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부설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세동향』 2003년 21호(11월 1일—15일)에 실린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을 쓴 김승국은 한국민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있으며 평화전문 인터넷 신문인 ‘평화만들기’ 대표로서 2003년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한 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방북기를 썼다.

필자는 평화 활동가로서 ‘군비축소’를 지론으로 삼고 있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군비축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과 북한 모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한다. 이는 당위일 뿐, 기아 속에서도 미국의 전쟁위협-북한정권 붕괴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비확장형 선군정치’를 펼치고 있는 북측의 현실을 직시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군비확장형 선군정치를 위해 경제난 해결에 쓰일 국고를 국방비로 충당하다 보니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이 북녘 땅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을 대변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이다.

위 인용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대개 북한의 식량난 및 인권상황은 미국의 대북봉쇄정책 혹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봉쇄하고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건설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군사적 무장에만 치중했던 것이며, 이것만 풀리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잘한 것은 모두 내가 잘난 탓, 못한 것은 모두 미국 탓’이라는 그런 철저한 반미의식이 놀랍기만 하지만, 우선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무장 불가피론’에 대해 살펴보자.

북한이 군사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북한은 국내총생산의 1/3에 이르는 국방비를 지출해왔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대치하고 있던 시절이라 북한을 직접 공격할 이유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막대한 예산을 계속 쏟아 부어 군대를 강화한 것은 ‘자주국방’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몰이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자주국방이란 집단안보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데 있다. 그것이 가장 값싸고 안전하다. 구 소련의 붕괴 이전까지 북한이 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무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소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국이 미국의 북한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미국은 이미 여러 번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듯 오랫동안 집단안보체

제의 혜택을 보아왔으면서도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외치며 경제발전은 뒤로한 채 군사적 무장에만 치중해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 지구상에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자기 힘만으로 국방을 유지할 수 없다(사실 미국조차도 ‘자기 힘만으로’의 자주국방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막강한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의 전면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을 이길 수는 없다. 러시아나 중국 등 대국들을 논외로 하더라도 조그마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 힘만으로 국방을 실현하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며 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북한 GDP의 3분의 1이 아니라 북한 GDP의 90%를 군사비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자주국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이 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것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그렇다고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북한이 굴복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북한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절대 ‘과도한 군사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강화하는 길이다. 김일성, 김정일이 약간만 판단능력이 있어도 북한과 중국이 강력한 동맹관계에 있는 한 미국이 절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 10만 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 국방비도 GDP의 5% 정도만 지출하면 된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 못하는 것은 현재 북한 정도의 무장력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 자동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한 그 어느 누구도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다른 하나의 고려 사항이라면 남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휴전선 몇 마일 밑에 인구 1,000만 명의 수도가 있는 우방국가 남한의 동의 없이 공격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방향으로만 행동해왔다. 2000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는 북한이 베이징을 지지하지 않아서 베이징이 떨어졌다(북한이 베이징을 지지했다면 베이징과 시드니는 동수였고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베이징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북한경제에 살 길이 생긴다는 중국 지도부의 끈기 있는 충고와 설득에도 북한은 꾀방귀만 끼며 들은 체도 하지 않더니 결국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았다.¹⁶⁾ 이 뿐만이 아니다.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무역이나 기타 경제관계에서도 약속 위반 행위를 무수히 범하곤 했다. 그 결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조금씩 마음이 떠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사실 김정일은 미국을 대단히 겁내면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식량난에 300만 명이 굶어죽던 때에도 오히려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포악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것은 앞서 말한 자위력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한편, ‘내부 통치용’

16) 2004년 6월 현재 북한은 뒤늦게야 중국의 충고를 받아들여 동맹관계 강화와 외형적 개혁 개방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의 의도도 존재한다.

북한은 현재 ‘선군(先軍)정치’를 최고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김정일의 공식직함도 국방위원장이다.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온 국가를 병영화, 군대화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부의 긴장감을 높여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제국주의 탓’으로 돌릴 핑계를 만들어 낸다. 또한 남한 국민들에게 군사적 공포감을 심어줘 더 많은 지원(사실은 갈취)을 얻어낼 수도 있다. 남한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유화정책을 쓰는 도중에도 북한이 간간히 군사적 도발을 일삼는 데에는 이러한 어리석은 계산이 깔려 있다. 자신의 군사력을 시위하면서 ‘선불리 건드리면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남한 국민들에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심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잖은 국민들은 “괜히 북한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평화비용이라 생각하고 갖다주자”거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래서 전쟁하자는 것인가” 하는 격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협박과 공갈의 수위를 높여가고, 남한의 일각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 진보진영은 이를 ‘냉전적 시각’으로 받아치면서 남한 내의 분열과 갈등은 심화되는, 북한으로서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 온 힘을 쏟고, 그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북한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지적(知的) 사기 가운데 하나이며, 설령 북한 지도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북한 정권의 크나큰 판단착오이므로 진보진영이 바로잡아주어야 할 부분이다.

3-2. 미국의 경제봉쇄론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의 원인을 대체로 1990년대 중반 갑자기 닥친 자연재해,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타격,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으로부터 찾는다. ‘한국진보운동연구소’는 1980년대 재야운동권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연구단체로 이들의 시각은 진보 시민운동단체 구성원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한국진보운동연구소장 박경순이 동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주간정세 따라잡기』 준비 6호에 기고한 ‘개성공단의 성격과 의미’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처럼 남과 북은 모두 경제적 난관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양측의 경제적 난관과 어려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인다. 남과 북은 경제구조와 체제가 서로 상극처럼 보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서로 반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기 다반사다. 그러나 놀랍게도 남과 북의 경제적인 난관의 근본원인은 같다. 남과 북의 경제적인 난관의 근본원인은 미국 때문이다. 남측은 미국에 의한 경제적 예측과 수탈(신식민지 경제구조, 신자유주의 세계화 강요) 때문이며,

북측은 미국에 의한 경제적 봉쇄와 제재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낳은 요인은 무엇인가? 먼저 ‘일시적인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북한의 경제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온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65년도 남한의 국민총생산은 북한 국민총생산의 1.6배였으나 1975년에는 3.2배, 1985년에는 5.9배, 1996년에는 22.4배까지 벌어졌다. 이후 국민소득의 추계는 GNP의 개념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4년 6월 현재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북한의 경제규모는 21조 9,466억 원(남한 원화 기준)으로 남한의 33분의 1(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1인당 GNI는 818달러(약 97만 4,000원)으로 남한의 15분의 1(6.5%) 수준이다. 남북한 경제규모의 격차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적으로 벌어져 이제는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끓고 끓아오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이 시작된 이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식량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년이 넘는 위기를 ‘일시적’이라고 표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도 국민들이 굶어죽는 ‘심각한’ 위기가 10년이라는 말이고, 이미 20년 이상 ‘만성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그 비극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해마다 해일과 태풍,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곤 하지만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그 기근이 10여 년간 계속되는 경우는 없다.

오늘날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사회주의권의 몰락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사회주의의 몰락이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동구유럽의 나라들처럼 아예 몰락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볼 때 사회주의의 몰락이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미국 등 서방세계의 경제봉쇄 정책이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가져왔는가? 사실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은 중국,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는 별 구속력이 없다. 물론 유럽이나 중동의 국가들도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다.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에 별 구속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외경제교류가 많지 않았던 것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대외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우선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외경제교류의 비중을 낮게 두는 자립경제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왔

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이전에도 전체 경제에서 대외무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에도 매우 폐쇄적인 정책을 고집해왔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경제거래를 꺼려온 것은 북한의 신용과 경제능력 부족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하지 않았다 해도 북한이 이런 조건을 활용하여 경제건설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사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이 반드시 강화돼 온 것만도 아니었다. 미국은 1950년 이후부터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 동서냉전시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엄격히 말해 경제봉쇄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및 사회주의 진영 스스로가 자체 경제교역에 중심을 두고 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경제제재의 기본 틀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로 1차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했으며 1999년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의 방문 이후 2차 경제제재 완화를 발표해 북한과의 경제교류 가능분야를 확대하였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주로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과 이의 시행령인 해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통상법(Trade Act) 등의 법규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제재 완화 이후 해제된 제재내용은 북한산 원자재 및 대부분의 상품의 미국내 수입, 미국산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의 대북 수출,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수송도로건설·관광산업 분야의 투자, 미국 민간인들의 북한 친지 및 개인에 대한 송금, 미국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일반화물의 대북 운송, 미-북간 상업용 항공기 운항 등이다. 제재완화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내용은 무기 및 미사일 관련기술의 대북판매 금지, 미 상무성에서 규제하는 군사용 물품의 대북판매 금지, 민간과 군사 이중용도로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의 허가 받지 않은 수출금지, 대외원조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 농업, 무역 및 개발법상 대북원조 금지,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지원 반대, 미국 민간인과 북한 정부간의 허가받지 않은 금융거래 금지, 동결된 미국내 북한자산에 대한 청구금지 등이다.

미 행정부의 제재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들의 관심이 낮고 북한과의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가 가시지 않아 북한으로서는 별다른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대외교역이나 시장질서에 적응할 만큼 변화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경제봉쇄는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북한을 대상으로 봉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외부세계를 향해 ‘스스로를 봉쇄한 것’이다. 주민들이 외국 노래를 부르다 적발되면 정치범으로 탄압하는 극단적으로 외부를 향해 폐쇄된 체제가 북한인테 굳이 외부에서 봉쇄를 하고 말 것도 없

다. 더구나 북한은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와도 교역을 하지 않고 사회주의 우방이며 풍부한 지하자원과 소비시장을 가진 중국을 향해서 만이라도 개혁 개방을 한다면 얼마든지 국가경제의 재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김정일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조차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하나의 가정이지만, 이들을 탄압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 해외 불법체류자처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금하거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자유를 허용했다면,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정부와 적절하게 타협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식량난으로 인한 비극은 그 충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그렇게 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역시 ‘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에 눈을 뜨게 될까봐서’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위기와 식량난의 본질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소유 및 계획경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둘째는 북한경제가 통째로 김정일 정권의 개인경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다.

국가소유 및 계획경제 노선을 채택해왔던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유재산의 부정과 절대적인 평등추구로 인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풍토가 생겨났고, 이것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다. 북한의 경우 폐기탈 등의 개인경작 형태의 수확량이 협동농장이나 국영기업보다 5~6배나 많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대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런 사례들이 모두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비효율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김정일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의 뒤를 잇는 후계자의 지위를 서서히 강화해왔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사실상 김일성과 별 차이 없는 지위와 권한을 갖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정권 장악 과정은 단순히 정치적 지위와 역할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黨)경제와 군(軍)경제를 일반경제와 별도로 구분해놓고 사실상 자신의 개인경제로 만들었다. 물론 일반경제도 김정일의 비준 없이는 일체 운영될 수 없다.

북한의 경제는 김정일 개인의 의도와 판단이 곧 ‘시장원리’였고, 취향과 배려가 곧 ‘계획’이다. 내각의 경제담당부서와 같은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존재일 뿐이다. 자재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사인(signature)이 필요하고, 그나마 자재나 연료가 부족해 사인을 받아온 당이나 군, 또는 공장기업소 일꾼들이 서로 자재를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일이 많다고 한다. 김정일의 사인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요(要)는 북한경제에 대한 김정일 개인의 ‘사유화’,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논리조차 허용되지 않는 ‘무계획경제’가 북한을 다른 여타 사회주의 나라들에 비해 훨씬 비참한 경제파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즉 북한의 경제파탄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개인의 손에 의한 ‘전혀 계획적이지 못한 경제’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화학공업의 대부분이 바로 군수산업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비는 GDP의 약 27%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03년판 월드 팩트북에 밝힌 북한통계 추정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국가예산 중에서 군사비 지출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북한은 2002년 국가예산 중 군사비로 약 52억 달러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액의 약 40%에 이르러 국내총생산대비 군사비 비중이 세계 최고이다. 한국이 약 3%, 중국이 약 4.3%, 미국이 3.2%, 대만이 2.7%를 군사비로 사용한 것과 비교할 때, 물론 절대적인 액수에서는 적지만 국가경제의 규모에 비하면 그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도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주민들이 굶어죽을 만큼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을 들고 나오고, 핵개발 추진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은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온 세상을 수령독재체제로 만들려는’ 김정일 정권의 비현실적인 망상과 이를 군사력으로 실현해보려는 폭력적인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3-3. 탈북자 증언에 대한 불신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북한인권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내가 북한을 30여 차례 드나들었지만 아사자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식량난이나 인권탄압실태를 목격한 적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며 “북한의 식량난 및 인권실태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적잖은 사람들이 북한을 오가고 있지만 굶어죽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면서 아사자의 수치 등을 믿지 않으려 한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의 조사자들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북한의 특정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사전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가려놓는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 부의장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난 실태를 조사하였던 앤드류 나초스가 『북한의 기아』에 잘 소개하고 있다. 나초스의 책에는 이에 대한 여러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한 NGO 요원이 1998년 봄 북한에서 돌아오는 길에 썼던 글이다.

북한에서 진실된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 배경자료를 읽어보고, 10일간 북한을 돌아보고, UNDP, UNICEF, 그리고 다른 NGO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북한상황을 희미하게 감지했을 뿐이었다. 북한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고, 북한이 거의 모든 외부세계에 대하여 국가의 신용을 잃었다는 점이였다. 북한을 최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구호요원이

있었는데—시차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존재하는 사상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없다는—그를 나는 동정하였다. 한 노르웨이 출신의 UNICEF 직원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신은 우간다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자이레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다. 신변안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1998년 12월까지도 UN은 부족한 정보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였다.

비록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는 인도주의 기관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용한 데이터는 구호기관들이 현재 북한의 사정과 사태파악을 위해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수집되고 있다. 구호요원들에게 예정에 없는 스케줄로 이루어지는 답사나, 북한 당국이 허락하지 않은 방문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미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북한의 상황을 평가하고, 감독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이 구호요원들에게 허락되지 않고, 쉽지 않다는 점은 정확한 통계와 결론을 내리는 데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래서 정확하게 밝혀진 통계에 기초하기보다 구호요원들에 의해 목격되고, 그리고 그들의 추론에 기초해서 결론에 이르게 된다.¹⁷⁾

이렇게 보듯 북한은 식량난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스스로 재난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호단체들의 조사활동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국제사회를 향해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면 당연히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일진대, 자유로운 주민면담 및 사진·비디오 촬영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허락하였으며, 현재 보도되는 북한 식량난의 실태를 담은 몇 장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이 전부이다. 다음은 북한의 식량난이 한창이던 1997년 한 신문에 실린 기사이다.

위와 같이 커다란 시각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물론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오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이다. 탈북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부의 방문자들이 온다고 하면 그 지역 관리들의 지시로 주민들을 통제하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다고 한다. 난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진다.

1. 거리와 역전에 있는 유랑민들을 이전시키고 사망자 처리조직에서는 사망자를 처리한다.
2. 방문자의 예정된 방문지점과 시간에 따라 사전긴급조치를 취한다.
 - 거리 청소 등으로 노출된 현상을 모두 몰아넣어 감춘다.
 - 꽃제비(유랑걸식자)를 몰아 가둔다. 기아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도록 행정단위에서 조치를 취한다.

17) 앤드류 나츠스, 『북한의 기아』, 다함미디어

- 인민반별로 회의를 열고 정치사상문제와 연계시켜 행동방침을 하달한다.
- 밖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이 올 무렵 호각을 불어 알려주면 누구도 다니지 못하고 죽은 듯이 집에 있다. 만약 밖에 나갔다가 잡히면 몇일동안 반성문을 쓰게 한다.

이외에도 외부방문자가 설령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북한에 가 보았거나 연변 또는 일본·중국 같은 데서 북한 사람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 볼까요? 사석에선 북한의 참상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하다가도 일단 공식 석상에선 이를 제대로 말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말했다가는요, 북한을 자극해 그나마 어렵게 뚫은 지원통로마저 막혀버릴 겁니다.”

아무리 북한 인민을 도우려 하는 사람도 이 장벽에 가로막혀 진실의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술한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다른 한쪽에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쪽의 식량난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은 아닌지, 또 하나의 정치선전은 아닌지 의심하곤 하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¹⁸⁾

이렇게 생생한 증언과 목격담이 있는데도 진보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 및 구성원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대체로 믿으려 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나 “북한 정보에 대한 남한 정부의 통제가 심하다”며 오히려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과연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제한되어 있는가.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실물 교과서’가 남한에 2004년 6월 현재 5천명 가까이 있다. 바로 탈북자들이다. 그런데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탈북자들은 체제가 싫어서 도망 온 사람들이니 그들의 증언으로 북한 사회를 가늠하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이 역시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먼저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래의 표와 같이 2004년 5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숫자는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이 발생하면 이들을 비난하는 방송을 해왔다. 김 모는 횡령을 하고 도망친 사람이며 최 모는 불륜을 저질러 도망친 사람이라는 식이다. 심지어는 그의 가족을 동원해 비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다보니 북한은 이러한 대응을 포기(?)하였다.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국경을 넘었다기에는 변명치곤 너무 구차하지 않은가. 그런데 남한 내의 일부 사람들은 과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계승하여 탈북자 모두(혹은 대다수)가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18) 한겨레신문 1997년 5월 13일자 북한 식량난 르포 기사

‘그러니 북한 현실에 대한 이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다. 그 중 일부가 혹시 북한에서 민·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왔다 해도, 그것이 증언의 진실유무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증언의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지 왜 개인적인 험담을 앞세우려 하는 것일까.

국내 거주 탈북자 현황

(2004년 6월말 현재)

89년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607	9	9	8	8	52	41	56	86	71

99	00	01	02	03	04.1~6	사망 이민	합계
148	312	583	1,139	1,281	760	272	4,750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당시 표현으로는 ‘귀순’)하면 기자회견이 실시되고, 아파트에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면서 영웅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각급 학교와 군부대를 순회하며 반공강연에 이들을 앞장세우기도 했다. 이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은, 탈북자들의 증언은 국내의 정보기관에 의해 미리 계획된 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모든 문제에 의문을 품고 일단 분석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까지는 좋다. 또한 탈북자들의 의견을 100%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곤란할 것이다. 그 중에는 분명 과장된 증언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적 감정이 실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일관되게 통제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일단 그 많은 탈북자들의 ‘입’을 단속할 수가 없다. 과거처럼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통틀어 수백 명 규모, 그것도 거의 휴전선을 넘어온 인민군 출신이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짜맞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입국하는 탈북자 중 군인의 비율은 한 해 10여 명으로 줄어든 반면, 노동자, 농민, 학생, 교수, 예술인, 당간부 등 다양한 계층의 탈북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연령대도 청장년뿐만 아니라 어린애, 노인까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들 한 명 한 명을 교육하면서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말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과거에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남북 체제 대결에서 남한의 우월성을 국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특정 증언을 강조하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는 어

떻게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앞장서 특별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북한을 자극할 증언을 탈북자들에게 하도록 만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치범 수용소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던 탈북자들을 특별히 관리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증언을 막는 데 급급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거기다 요즘은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생겨났고, 이른바 진보적인 성향의 잡지들도 자유롭게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다. 조작과 과장이 있다면 날카로운 기자의 눈에 얼마든지 포착되어 폭로되었을 것이다. 몇 해 전에는, 탈북자들이 입국 후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진보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한 사건도 있었다. 정보기관이 탈북자들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탈북자들의 의견은 일부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즉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극히 궁핍한 생활을 해왔거나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들의 주장으로 북한 사회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북한 내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북한의 지극히 평범한 ‘표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정말로 못사는 사람은 다 굶어 죽었고, 탈출한 사람들은 그나마 뭘 힘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북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특별히 못살거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 먼저 입국한 탈북자들이 중국내 탈북브로커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내에 장기 체류하지 않고 짧은 경우 5~6일 만에 위조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국 체류 기간 중에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으니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사고와는 차이가 많다”라는 주장도 이제는 과거의 말이 되어 버렸다. 북한에서 이들의 직업도 의사, 교수, 교사, 과학자, 설계사, 농민, 무용수, 운동선수, 노동자, 광부, 기관원 등 너무도 다양하다. 북한에서의 직업으로 따지면 없는 직업이 없을 정도다. 최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도 있다. 해방이후의 과정부터 모두 증언할 수 있는 80노인도 있고, 세 살배기 어린이도 있다. 이들의 증언을 모두 모으면 ‘축소판 북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 ‘북한 일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정착금과 남한에서의 지위를 바래 탈북자들 스스로 거짓 증언을 경쟁적으로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침소봉대일 뿐이다. 앞서 말했듯 어떻게든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증언을 차단하려고 하는 정부가, 북한 실정을 잔혹하게 과장한다고 정착금을 더 주고 지위를 보장해 주겠는가. 물론 방송출연이나 서적판매 등을 노리고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탈북자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들은 수천 명에 비하면 한두 명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에는 워낙 많은 탈북자들이 있다보니 특정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다른 탈북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 NGO 관계자와 만난 탈북자들이 남한에 갈 요량으로 자신이 고급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고위 장성(將星)이었다든지, 핵관련 시설에서 연구자로 일했다는 등의 거짓이다. 하지만 이 역시 검증의 체계가 충분할 만큼 갖추어져 있으며, 중국에서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있지만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증언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믿을 만하며, 이들의 증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북한 사회를 이해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통신이 발달되어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질문과 답변으로도 탈북자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북한문제에 열의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을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등에 자원봉사자로 찾아가 이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계속하여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진보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직무유기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때, 사람들은 아우슈비츠를 탈출한 유대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어떻게 인간을 가스실에서 그리 잔혹하게 죽이고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 수 있느냐며, 유대인들이 나치에 대한 투쟁을 재촉하기 위해 증언을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지식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한때나마 그들의 증언을 흘려들었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 교훈을 새겨들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진보 시민운동단체의 관계자들은, 몇일 동안 북한 당국이 이끄는 대로 평양 시내와 몇몇 관광지를 다니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잘 믿고 감동스러워 하면서 정작 북한에서 나서 자란 탈북자들의 증언은 경원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 멀지 않은 훗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 속에라도 숨어들고 싶을 정도로 후회할 날을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늦게라도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길에 나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IV.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4-1. 북한문제의 본질적인 책임자는 김정일

그럼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남한의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북한의 현 실정에 대한 김정일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김정일의 집권기를 김일성 사후인 1994년부터 보면서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더 지켜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나아가 극도로 불리한 시기에 부실한 정권을 이어받아 이 만큼 유지했으면 대단하지 않느냐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한다. 이는 북한의 권력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현 북한문제의 책임이 권력을 물려줬고 후계자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김일성에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구축한 장본인은 바로 김정일이다.

김정일의 ‘완전’ 집권기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맡아 당과 군의 고위직책을 두루 갖게 됨과 동시에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한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해서였다. 그 이전의 ‘예비’ 집권기는 197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 이미 삼촌인 김영주를 밀어내고 후계자로 내정되어 ‘친애하는 지도자’, ‘당중앙’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예비 집권기’를 남한으로 말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라고 할 수 있겠으나 후계자가 갖는 권한의 힘은 남한 대통령 당선자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김정일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손광주는 『김정일리포트』에서 김정일의 일생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단계 ‘출생과 성장’(1941~1964), △2단계 ‘정치입문과 초고속 성장’(1964~1973년), △3단계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1974년~1985년), △4단계 김정일 통치 김일성 군림(1985~1994년), △5단계 김일성 사후 생존전략(1994~현재)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집권기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며, 최대 30년까지 늘어 볼 수도 있다. 북한의 고위층과 접촉할 수 있었던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김일성은 국가운영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고 말한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김정일의 집권기를 굳이 축소시켜주려는 연구자는 김정일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하튼 김정일은 적어도 1980년대부터는 통치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었다. 현재 북한의 사회적 몰락을 가져온 주된 원인은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수령절대주의’에 있었던 바, 이를 주창하고 실현시킨 사람도 김정일이다.¹⁹⁾

19) 전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황장엽은 북한사회의 성격을 ‘수령절대주의 사회’라 규정한다. 수령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다.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대개 북한의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 등은 잘 알고 있지만

백 번 양보해 김정일의 집권기를 단 1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10년이면 한 정권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 아닌가. 단임으로 5년마다 교체하는 남한의 대통령에게도 실정을 거둬들여 퇴임을 요구하는 판에 10년 동안 장기집권한 사람에게 자꾸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김일성에게 그 탓을 돌리려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지난 10년간 김정일이 취한 정책을 전 세계인들은 너무도 명확히 보아왔다. 김정일은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죽어도 그것을 모른 척 하며 “나는 경제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지도자이고, 그 와중에도 천문학적 인 돈을 들여 핵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군국주의자이며, 사회주의 혈맹인 중국 쪽을 향해서 만이라도 개방의 문을 열었다면 주민들이 굶어죽는 상황은 면했을 텐데 오히려 국경을 더욱 강하게 차단하고 탈북자들을 처형했던 폭군이다.

때가 되면 김정일도 개혁 개방을 택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김정일은 이미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가장 호기(好機)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한의 우호적 분위기와 원조가 쏟아지고 국제사회도 북한지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던 때였는데, 김정일은 ‘실기(失機)’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특히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 사회가 대단히 복잡해지고 풀어나가야 할 난맥상이 많을 텐데, 지난 20~30년간 그렇게 단순한 사회 시스템하나 제대로 운영 못했던 사람이 과연 새로운 체제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모저모를 살펴보아도 김정일 정권에 기대를 거는 것은 어리석다.

따라서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은 ‘김정일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는 관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관점에서 모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남한 정부의 대북유화정책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겠다는 강한 집념의 초심(初心)으로 돌아와야 하며, 시민운동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도 궁극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에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대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마찬가지다.

실제 북한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이며 주민생활을 가장 크게 제약하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모르고 있거나 그 의미를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들에게 ‘10대 원칙’은 그 어떠한 법규정보다 우위에 서 있다.

1974년 4월 14일 김일성의 62회 생일 전날 김정일이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문헌을 통해 공포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등 10개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각 항목마다 4~10개의 실천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은 모두 이것을 암기하여야 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사상 및 생활을 총화한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인들은 대부분 ‘10대 원칙’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수령의 초상화나 배지 등을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했다든지, 외국노래를 불렀다든지, 학습이나 조직생활에 불성실했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 부족’으로 해석되며 ‘10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어 처벌받는다. 이러한 수령절대주의는 북한사회를 극도로 경직되게 만들었으며 수령우상화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결국 오늘날 북한사회의 몰락을 가져오게 만든 주요인으로 꼽힌다.

4-2. 북한인권과 체제변혁 문제는 구별될 수 있나?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체제붕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제안한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되기 약 4개월 전인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북 인권의 개선이 아니라 북 체제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북 인권문제는 인권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인권문제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 자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한체제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안 될’ 일인가. 북한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니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 시민운동단체의 관계자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느 사회의 인권문제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남한을 비롯한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의 인권문제란 대개 ‘인간적 차별과 편견의 문제’이다. 즉 피부 빛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취업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여성 취업 시 외모를 기준으로 보는 문제, 동성애자라 하여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문제 등 대개는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인권운동의 주요 테마로 하는 이른바 ‘마이너리티(minority) 운동’이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과 편견은 대개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며,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체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라. 공개처형의 문제, 정치범 수용소, 학살과 고문, 통행증제도, 선거의 자유 부재, 집회·결사·언론의 자유 일체 부재(不在) …… 앞 문단에서 나열했던 인권운동의 주제들과 그 무게에 있어 너무도 다르다. 어느 것 하나 정치적이지 않은 문제가 없다. 어느 것 하나 체제의 본질적 모순에서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가운데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지 않거나 특별히 의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체제변혁의 한 방편으로 삼는 것을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불성설이다. 특히 과거에는 남한의 평범한(?) 군사정권에 대해 ‘타도’의 깃발을 들고 싸웠을 남한의 진보적 시민운동단체의 구성원들이 북한의 잔혹

한 독재정권에 오늘과 같이 관대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고와 행동이다.

4-3. 하지 않으려니 문제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각종 토론회에서 진보 시민운동단체의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남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종종 묻는다. 북한의 현실을 따져보고 비록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작더라도 원칙적으로 맞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해보고 나서 ‘없으면 말고’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시민운동가의 자세가 아니다.

북한의 일당독재체제를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달리 없다. 입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걱정하는 데는 한 푼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애국이라면 애국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이 몰고 올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모든 종류의 대북지원을 김정일 정권을 돕는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칭 애국자가 할 짓이 아니다.

위 인용문은 2004년 6월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유시민이 시사평론가이던 시절, 2002년 4월 인터넷 신문 ‘프레스인’에 기고한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의 제목은 “임동원 특사, 돈 좀 쓰십시오”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대북지원을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물론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으며—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마저도 어려워진 것 같다.—이것은 북한인권개선에 있어 눈에 띄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외견상 보이는 북한인권·민주화운동의 모습은 ‘북한의 실태는 이렇다’고 자꾸 떠드는 것, 북한 문제와 관련한 사건이 있을 때 입장발표를 하는 것 정도로 보일 수 있다.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운동’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없거나 별 의미 없는 활동일까?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민주화운동이 암흑기이던 때, 적잖은 인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남한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선전과 캠페인을 벌였다. 외국의 종교인이나 인권운동가, 지식인들은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주었다. 이는 남한의 독재정권에 충격을 가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화운동가들에게는 세계 도처에 우군(友軍)이 있다는 정신적 지원이 되었고, 독재정권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을 주었을 것이다. 무인도에 홀로 표류된 사람에게는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의 불빛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 되듯, 민주화운동의 수

준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에서 가슴속으로만 체제변혁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외부에 지원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과거에 해외에서 남한의 민주화를 촉구했던 사람들에게 ‘행동으로는 한 일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들었다’고 비난할 수 없듯 북한인권·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다. 또한 선전활동 이외에도 교육, 캠페인, 탈북자지원, 국제사업, 북한 내의 민주화운동세력과 연대하려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제가 있다. 외부에서 보면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 같아도, 할 일이 많고도 많다.

국회의원이 된 후 유시민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한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돕는 길이라고 본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남한에서 북한민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북유화정책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아니다. 유시민 같이 유능한 사람이 북한민주화운동을 위해 할 일은 정말 많다. 예를 들어 외국어 능력이 있으니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할 수 있고, 대중적 영향력과 웅변력도 있으니 남한 청년들에게 사상 최악의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자고 사자후를 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신이 최대한의 힘을 보태려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북한체제도 바꿀 수 있다.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그런 의지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북한의 폐쇄적이고 폭압적인 독재정권도 분명히 바꿀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의 진보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들—민주화운동 세대들의 초심 아니었던가.

덧붙이자면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거부하는 척 하면서도 비록 형식적일지언정 그 개선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예를 들어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을 살펴보자.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를 통해서였다. 당시 인권소위는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관련 규약을 준수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유엔에 보고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원조를 증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러한 결의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른바 ‘B규약’)에 탈퇴하는 것으로 과격하게 응수했다.²⁰⁾ 이에 유엔은 국제인권규약은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해에도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1999년 이후 줄곧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왔다. 이렇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줄기찬 제기가 있자 북한은 1998년 B규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으면서도 ‘B규약 이행에 대한 제2차 정기보고서’를 최초 보고서 제출 16년 만인 2000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고, 탈북자 송환 후 처벌문제를 거론하

20)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처럼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B규약 탈퇴선언은 국제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에는 인권문제를 정치적 흥정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퇴와 관련한 규정을 애초에 두지 않아 북한의 탈퇴선언은 의미가 없었으며 오히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더욱 깊게 했다.

면 그들의 생존을 확인해주기도 했다.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자 헌법 조항을 개정한 적도 있다.

이렇듯 북한은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꾸준한 제기만 뒷받침되면 어떻게든 모양새(형식)를 갖추려고 노력한다. 그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의 내용이 적다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내에서 인권개선운동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외부로부터 형식의 개선은 내용의 개선을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외부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주장이나 활동이 아니며, 현실을 고려치 않는 과격한 주장이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활동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가장 앞장서 환기시켜나갈 수 있는 한국 정부는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고 한국의 진보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하려고 먼 나라 스위스에까지 달려갔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4-4. 남한은 북한인권·민주화운동의 지원기지

북한문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한’의 존재다. 만약 북한이 외부에 동포가 전혀 없는 국가였다면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 있어서도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혈연적 유대감이 없는 이국(異國)의 체제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에 ‘동포들이 세운 나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혈연적 유대감은 남한이 북한민주화운동의 지원기지가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특히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했다. 남한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의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발전했으며, 북한의 민주주의 문제에 관심을 돌릴 만한 여력도 충분히 있다. 정치·경제적인 우월성은 남한이 북한민주화운동의 지원기지가 되는 두 번째 이유이다.

북한민주화운동은 폭압적인 김정일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여야 하고, 그 성과가 단시간 내에 보이지 않는 일이며, 그러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북한민주화운동의 인적·물적 토대는 남한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지만 주요한 활동 무대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연결된 중국 연변지역이 될 것이며, 이 지역에서의 활동은 높은 비합법적 활동 능력이 요구된다. 남한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비(非)합법 활동에 단련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생각만 돌려세워 북한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면 남한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좋은 원천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남한이 북한민주화운동의 지원기지가 되는 세 번째 이유이다.

남한의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살려 북한민주화운동을 추동하는 기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민주화운동을 음양으로 돕는 남한 정부가 들어선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남한 정부가 북한민주화운동에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남한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오늘날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태도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적극적인 민주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고, 소극적인 민주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의지를 꺾는 일이며, 이런 문제에 관해 별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민주적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활동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 역으로 남한의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한 목소리를 낸다면, 김정일 정권에게는 벼락같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고 민주주의에 목마른 북한 주민들에게는 반세기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될 것이다.

V. 북한인권 · 민주화운동단체 소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현재 북한인권·민주화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들을 소개하겠다. 북한문제와 관련된 단체는 크게 북한의 인권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체, 북한의 체제변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체로 나뉘볼 수 있다. 그리고 부문조직으로 탈북자 단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단체, 북한선교를 목표로 한 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활동방식을 가진 단체들이 각기 존재한다. 각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민주화운동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단체들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대표적인 단체들을 선정했음을 양해 바란다.

5-1. 북한인권개선 중심

여기에 소개하는 북한인권개선 중심 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좋은벗들은 주로 식량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존권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일반적으로 북한체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을 시 인권문제 제기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거나 오히려 인권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활동 중이다.

5-1-1. 북한인권시민연합

1996년 5월 발족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시민운동단체. 1970년대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창설을 이끌었던 윤현 씨가 창립을 주도했으며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현 이사장이 2004년 3월 1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 타도나 김정일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인권운동을) 정치적 선전도구화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한 대로, 북한인권운동을 체제변혁운동과 연관하여 생각지 않지만 또한 남북화해협력사업을 절대화하여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꺼리는 풍토 역시 비판한다. 주된 활동은 매년 개최되는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로 1999년부터 2004년 4월까지 5차례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 2회 국제회의는 한국에서 진행하다 3회부터는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화한다는 취지 아래 일본 도쿄(3회), 체코 프라하(4회), 폴란드 바르샤바(5회)에서 개최하였다. 탈북자 및 북한인권전문가, 기타 인권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탈북자 송환 후의 처벌, 여성·청소년 문제, 고문과 학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수형시설 문제 등 매해 주제를 확대해가며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여론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세 미만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지도·가정방문·생활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북한인권(한글·일본어)’, ‘생명과 인권(한글·일본어·영어 계간지)’ 등 자료집을 발행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북한인권운동 전문가를 교육 양성하고 있다.

5-1-2. 좋은벗들

“1996년 12월, 북한동포돕기를 범불교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창립하고 불교의 동체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굶주리는 북한동포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999년 5월,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 ‘좋은벗들’로 명칭을 바꾸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인 북한 식량난과 식량난민 문제해결을 출발점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난민구호사업과 인류가 안고 있는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운동, 그리고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인권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 ‘좋은벗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위 소개대로 ‘좋은벗들’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좋은벗들의 사업 가운데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북한의 식량난 및 탈북난민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사업이다. 1997년 9월 30일부터 1998년 9월 15일까지 11개월 동안 중국 만주지역에서 탈북자 1,694명을 면담 조사하여 식량난 시기 북한 주민 3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북한식량난 실태보고서’를 발표하여 큰 관심을 모았으며,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4월 3일 동안에는 중국 동북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 2,479개 마을을 대상으로 탈북난민의 숫자를 파악, 중국내 탈북자 숫자가 대략 14~19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좋은벗들의 이러한 조사는 북한의 식량난과 중국내 탈북자 숫자에 대한 유일한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학적으로 허술한 조사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에 뛰어들어 어떻게든 실정을 객관적인 수치로써 공개하고자 한 좋은벗들의 공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좋은벗들은 북한관련 사업 이외에도 남한 입국 탈북자의 사회정착 지원사업, 반전평화운동 등을 결부하여 활동하고 있다. 좋은벗들의 창립을 주도한 법륜스님은 2002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5-1-3.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북한의 체제변화와 인권개선, 선교단체의 요소를 골고루 갖고 있는 단체이다.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1999년 3월 설립된 ‘탈북난민보호 UN청

원운동본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본부'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중국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 1,180만 장을 접수하여 2001년 대한민국 국회 및 유엔에 제출하였다. 유엔에 제출된 청원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다. 1999년 '탈북자실태조사단'을 파견한 이래 정기적으로 중국 연변지역에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탈북난민돕기 시민 걷기대회' 등 각종 대중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NK친구들'이라는 산하 단체를 구성하여 'NK선교단', 'NK프로덕션', '한반도예술단', '통일태권클럽', 'NK교실' 등의 소모임을 운영중이다.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에 이어 2003년부터는 'World Opinion Leader 서명운동'이라는 새로운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전의 청원운동과 내용은 유사하나 탈북자 문제에 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8년 북경올림픽 보이콧 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려는 점이 다르다. 전 서울시장 김상철 변호사가 창립을 주도했으며 현재 본부장을 맡고 있다.

5-1-4. 북한인권정보센터

2003년 4월 14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가 많으나, 남한의 인권침해가 많으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계량적으로 나온 게 없고……”라며 확답을 피하다 답변 말미에는 “북한 인권 실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북한민주화·인권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해 예산에 북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항목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북한민주화·인권단체에서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증언을 많이 청취해 놓기는 했지만 분야별로 정리하거나 계량화하려는 시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설립된 단체가 북한인권정보센터이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 기록,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연구자 및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북한인권침해행위 사례 조사사업, 북한인권침해행위 자료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연구 결과물 발간 및 발표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제공 사업 등을 준비·실행 중이다.

5-2. 북한체제변혁 중심

여기서 '북한체제변혁 중심'이라 함은 인권문제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앞서 말한 대로 인권단체 중에도 북한체제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단체가 있지만 체제변혁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단체들을 이 그룹에 묶었다.

5-2-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주로 학생운동권 출신의 20~30대 청년들을 주축으로 1999년 12월 10일 결성됐다. 사무, 교육, 선전, 국제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사업으로는 1년에 2회, 1회당 3~6개의 강의로 구성된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인권실태 및 북한민주화운동의 전략·전술, 북한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정세 등으로 이루어진다. 선전사업은 북한인권 전문잡지 『Keys』라는 이름의 잡지를 발간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Keys』는 열쇠(Key)의 복수형으로, 북한의 닫힌 체제를 여는 열쇠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0년 2월 한글판 창간호를 발행하여 연간 11회 제작·발행하고 있으며, 2000년 6월부터 영문판을 계간(季刊)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2002년 7월부터는 일본어판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2004년 10월부터는 북한문제 전문 인터넷신문인 『Daily NK』(<http://www.dailyNK.com>)을 한글, 영문판으로 운영중이다. 국제사업은 북한문제와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 참가, 해외 NGO와의 연대, 북한문제와 관련한 해외언론인 취재 협조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동적인 북한민주화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북한민주화·인권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기별 대중집회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질곡의 現代史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정치적 自由와 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어떤 물리적 억압에도 굴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1987년 6월의 거리에서 우리는 민주화의 성취를 맛보았다. 그 자랑스러운 순간을 가슴깊이 간직한 우리는, 오늘, 북한에서 일어나는 극도의 정치적 억압과 그로 인한 민중들의 정신적·육체적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의 갈망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었던 바, 모르고서는 모르되 알고서는 두고 볼 수 없는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맞서 우리의 형제이자 동지인 북한민중을 구출하는 長征에 나선다. 이미 죽어간 북한 민중에 대한 애도와, 또한 사라져 가는 어린 세대에 대한 애통어린 사랑으로 고달픈 길을 마다 않을 것이다.”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립선언문 中

5-2-2.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애초의 명칭은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였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명칭이 북한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며 통일부에서 변경을 요구,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주요 활동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최초의 남한 입국 탈북자인 강철환, 안혁 씨가 추축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수용소 수감 경험이 있는 탈북자 및 청년탈북자들을 다수 망라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한 제반의 활동을 전개 중인데, 먼저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알리기 위한 선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회령, 청진, 화성, 요덕, 개천 등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위성사진을 확보하여 정치범 수용소의 구조를 공개하고,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본인이나 친척, 지인 중 수용소에 수감된 사례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UN 청원운동과 정치범 구명을 위한 각종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옥수수 한 그릇과 소금 한 숟갈로 14시간의 중노동과 채찍을 견뎌야 하는 곳. 도주하던 친구의 공개처형 된 주검위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 뱀이나 쥐를 잡은 날이 최고의 행운으로 되는 곳.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고, 치욕인 곳.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곳. 이곳이 바로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이다.

나치수용소에 버금가는 전대미문의 인간도살장에서 죽음만을 축복으로 기다리는 20만의 정치범을 두고 어찌 2,000만의 북한 인민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수십, 수백만의 목숨을 독재의 수단으로 삼는 수령유일체제를 머리에 이고 어찌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녕을 논할 수 있으며, 인류의 정의, 인간의 양심, 자유와 박애를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창립선언문 中

5-2-3. 북한민주화학생연대

북한민주화운동단체 중 대학생 및 청년을 주요 조직·활동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 2003년 3월 창립되었다. 비(非)한총련 계열에 있는 대학 총학생회 회장 및 간부, 학생운동단체들이 포괄되어 있다. 4.19, 8.15 등 학생운동권의 집회 및 시위가 많은 시기에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대중 집회를 기획하여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타블로이드 판 월간신문 『Justice』를 제작하여 전국의 대학가에 배포하고 있다. 남한에 조직된 청년 탈북자

단체와의 연대, 남한 입국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생활적응 자원봉사 활동도 주요 사업내용이다. ‘학생회연대기구’와 ‘학생운동정책협의회’를 특별기구로 운영 중이다.

5-3. 탈북자단체

여기서 탈북자 단체라 함은 남한입국 탈북자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탈북자들은 남한 내에 연고가 없다보니 여러 개의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조직은 경찰청 산하의 ‘승의동지회’로 탈북자들이 입국하면 자동적으로 소속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탈북자들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승의동지회에서의 소속감이 감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탈북자 단체들이 생겨났다. 그중 북한체제변혁 및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로는 ‘탈북자동지회’가 두드러진다(북한민주화운동본부도 탈북자 단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탈북자동지회’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친목과 남한 사회 적응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단체, 혹은 탈북자들의 남한내 권익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체 등은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5-3-1. 탈북자동지회

전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황장엽 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로 친목과 사회정착, 탈북자 권익신장에 집중했던 과거 탈북자 단체와는 다르게 북한체제의 변혁을 중심목표로 창립하였다. 주요 활동으로 월간 『탈북자들』을 발간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탈북자들의 증언과 주장으로 편성하고 있어 북한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발행하는 매체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가장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민주화·인권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중집회를 개최해 여론을 환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실상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오는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을 관심분야에 따라 탈북자들과 연결하여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싸운 인사들을 애국열사로, 민족의 영웅으로 높이 떠받들고 무한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참상은 일제 통치를 몇 배로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북한에 남겨 놓고 온 부모, 처자, 형제들과 정다운 동지들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들을 하루빨리 구원하기 위하여 한 몸 바쳐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민족적 영웅이 되고 애국의 길에서 물러서면 유량민의 평가밖에 차려질 것이 없습니다. 「탈북자동지회」는 모든 탈북자 동지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 문화적으로 도와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 탈북자동지회 창립사 中

5-4. 북한선교단체

북한선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소개되어 있는 ‘탈북선교지침’에는 “탈북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첩보원이란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에 이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마라, 믿을 만한 조선족 동역자를 찾으라, 안전한 장소를 찾으라, 집에서 전화를 사용하지 마라, 당신의 집을 공개해서 탈북자들과 절대 함께 있지 마라, 조직화된 점 조직으로 사역을 늘려라, 비밀용어를 사용하라, 사역자를 너무 노출시키지 마라, 항상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성령님께 민감한 자세를 가지라, 탈북자들을 한 집에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조용히 있도록 하라, 한어(중국어)를 빨리 배우고 중국 조선족이나 중국인처럼 행동하도록 힘쓰라”는 11개 항목의 안전지침이 있다.

북한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합법적으로 북한의 교회와 접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비합법적으로 북한 내에 신자를 양성하고 지하교회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식을 추진하는 분들의 취지는 깊이 이해되지만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북한 당국의 선전에 일조하는 효과 밖에는 없다.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이후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대거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내 활동은 비합법의 조건인 바, 북한선교를 위해 파견된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심지어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대표적으로 김동식,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이 있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북한선교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는 김진홍 목사가 학교장으로 있는 ‘통일선교학교’가 대표적이며 한국오픈도어즈, 북한선교연구소, 모퉁이돌선교회, 두리하나선교회 등 약 2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실질적으로 중국 등지에 선교사를 직접 파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그 규모와 성과, 활동내용 역시 알 수 없다. 물론 북한 선교활동은 기독교만 해당되지 않겠지만,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은 북한선교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좋은벗들’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에서 시작하였지만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북한선교활동은 일종의 사이비종교라고 할 수 있는 수령절대주의를 국가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체제변혁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견을 앞세우지 않는 종교단체의 성격상 직접적으로 이를 표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많은 북한선교단체들이 있지만 탈북자 인권문제 등에 공개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를 대표하여 소개한다.

5-4-1. 두리하나선교회

2001년 12월, 탈북자 12명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에서 몽골로 가는 국경을 넘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을 지원했던 선교사도 함께 체포되어 220일 동안 중국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마친 후 석방되었다. 국내외에 석방운동을 불러일으켰던 당시 선교사가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대표다. 1999년 10월 설립된 초교파 선교단체로, 1999년 여름 중국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탈북자들의 실태를 목격한 기독교인들이 탈북자 보호와 북한선교를 위한 단체를 만들자고 결의한 데서 출발하였다. 북한인권문제보다는 선교활동 자체에 주력하는 여느 선교단체들과는 다르게 제반 북한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고 있다. 2003년에는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모임인 ‘CGO’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범국제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북한정권 아닌 북한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북한돕기운동, 탈북자 난민지위 획득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사단법인 두리하나’로 통일부 허가법인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다.

5-5. 납북자 관련단체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운동은 김정일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운동이다. 납북자는 크게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 납북자로 나눌 수 있다. 한국전쟁 시기 납치된 사람은 9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사람은 총 3,767명으로 이 중 500명 정도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움직임은 2000년 초부터 태동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전향장기수를 조건 없이 북한으로 송환하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납북자 가족도 송환하라는 여론이 확대되어 3개의 모임이 생겼다. 납북자가족모임과 납북자가족협의회는 한국전쟁 이후 납북된 어부 및 승무원, 실종된 학생 가족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한국전쟁시기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조직된 피랍탈북인권연대는 납치자문제 뿐 아니라 탈북자 문제, 북한의 제반 인권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그룹에 포함했다.

5-5-1.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은 2000년 2월 28일 납북자 문제와 관련된 최초의 단체로 출발하였다. 처음 명칭은, 당시에 파악된 납북자의 숫자가 454명이었던 관계로 ‘454납북자구출모임’이었다. 이후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으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가족들이 속속 회원으로 결합, ‘납북자가족모임’과 ‘납북자가족협의회’로 분화되었다. 북한 정권에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호소하는 서명 및 국회청원, 납북자 송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납북자가족회’와도

연대하여 공동기자회견 및 집회, 토론회 등 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및 송환되지 못한 억류자 현황

구 분	계	어부	KAL	I-2정	기타
납북	3,745	3,662	51	20	12
억류	447	407	12	20	8

자료: 납북자가족모임

주: 이 집계에는 남한에서 실종되었으나 사실은 북한에 납치되어 공작원 현지화 교육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사람(체포된 남파간첩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고 있음)이나 중국 등지에서 납치된 선교사 등은 제외되어 있음.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자면 그들은 자국민의 납북사건에 대해서 시종일관 정부의 힘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일 수교 교섭 등 북일관계에서 납북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저희는 참으로 부러움을 느낍니다. 1987년의 동진호 납북 사건에서 보듯이 김만철 일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치적 고려로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온 납북자들의 인권은 간단히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차라리 절망을 느낍니다. 저희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납북자문제를 기본적인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도 햇볕정책의 수혜자이고 싶습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 그늘진 곳에 있는, 분단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햇볕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납북자가족모임. 2000년 2월 28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中

5-5-2.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자 가족 300여 명이 2000년 11월 30일 결성한 ‘6.25사변납북자가족회’가 시발점이 되었다. 한국전쟁시 납북자 문제는 그것을 증명할 만한 공식자료가 없어 초기에 애를 먹다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정부문서보관소에 잠자고 있던 ‘6·25사변 피랍자 명부’를 찾아내면서 활동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 명부에는 한국전쟁 당시 납치된 9만 4,700여 명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를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였다. 이외에도 신익희 선생 유품에서 나온 6·25사변 피랍인사 명부(2,316명), 1956년 대한적십자사 신고(7,034명), 공보처 통계국 작성 6·25사변 피해자 명부(2,438명) 등을 모두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다.

5-5-3. 피랍탈북인권연대

2000년 3월 16일 조선일보 색션 ‘NK리포트’에는 남한 입국 탈북자 유태준 씨가 북한에 있는 아내를 마저 탈출시키려 중국에 갔다가 실종되었는데,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故 이서 목사 등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공개처형된 유태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였다. ‘유태준 사건’은 북한 당국이 평양방송을 통해 유태준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전환점을 맞았는데, 이후 유태준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북한을 탈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입국하였다. 입국한 유태준 씨는 시민연대의 발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고문한 상태를 치유하여 방송에 억지로 내보낸 것이라고 증언했다. 유태준 사건을 계기로 피랍자와 탈북자의 구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성된 단체가 ‘피랍탈북인권연대’이다.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로 구성되어 피랍자 및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가 발생하였을 시 공개성명과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석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대중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남한입국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시설인 ‘하늘꿈 학교’의 개교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북한 인권·민주화운동의 주요 활동 내용

북한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선교활동을 비롯한 비합법적
영역이라 구체적 활동 내용
파악 불가능

탈북자 관련 활동

- 재중 탈북자 보호 및 지원
 - 좋은벗들, 피랍탈북인권연대
 - 각종 선교회
(두리하나, 예랑, 모퉁이돌 등)
- 남한입국 탈북자 적응 지원
 - 북한인권시민연합, 좋은벗들
- 기획망명 등 국제여론 환기 활동
 - 피랍탈북인권연대,
두리하나선교회

부문별 활동

- 납북자 송환 운동
 -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제고를 위한 활동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선전활동

남한내 선전활동

- 선전물 발행(내부소식지 제외)
 - 북한인권시민연합 '생명과인권'(국/영/일)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Keys'(국/영/일)
 - 탈북자동지회 '탈북자들'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
북한민주화학생연대 'Justice'
- 국제회의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 조사보고활동
 - 좋은벗들 : 국경지역 난민실태 보고 등

해외 선전활동

교육 및 캠페인

- 교육사업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포럼'
 - 좋은벗들 - 만주지역 역사기행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난민문제 아카데미'
- 각종 캠페인 및 대중행사
- ※ 기타 북한민주화·인권단체의 국제적 연대망을
구축하는 활동과 북한에 라디오 보내기,
민영(民營)대북방송 제작 등의 활동이 있다.

VI. 글을 맺으며

— 진정한 국제주의자, 진보주의자를 기다린다

앙드레 말로, 어네스트 헤밍웨이, 파블로 네루다, 시몬느 베이유, 조지 오웰, W H 오든…….

이들은 모두 1930년대 후반 스페인 내전 당시 인민전선 정부 편에 가담하여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대와 맞서 싸운 실천적 지식인들이다. 프랑스, 미국, 칠레, 영국 등 각기 국적은 달랐지만 펜 대신 총을 들고 ‘지도상에서만 봐오던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이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다. 말로는 비행편대를 맡아 조종사로 참전했고, 당시 스물일곱 살의 처녀였던 베이유는 의용군 병사로 참전했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귀국하기도 했다. 공산주의가 되었던 국가주의가 되었던 인간성을 말살하는 체제와는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작가 조지 오웰 역시 의용군으로 참가했다.

외인부대, 국제여단으로 불리던 이 부대에는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지만 ‘반파시즘’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단결하여 싸웠다. 헤밍웨이처럼 평생 특정한 이념적 편향에 휩싸이지 않고자 했던 작가도 파시즘에 반대하며 종군기자로 나섰고 인민전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피카소는 대작 ‘게르니카’를 통해 나치 독일이 프랑코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폭격기를 보내 스페인의 소도시 게르니카를 초토화한 사건을 표현함으로써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전세계에 알렸다. 미국의 전쟁 사진작가 로버트 파카의 ‘어느 인민전선파 병사의 죽음’ 역시 스페인의 상황을 세계에 알린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생 뵈쥐베리도 이즈음 특파원으로 스페인에 와 전쟁 상황을 프랑스에 알렸다. 당시 스페인은 세계의 진보적 지성이 총동원된 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역사는 이러한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약 4만 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지금처럼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던 시절에 “스페인 인민이 파시스트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소리에 주저 없이, 항공편도 변변찮던 시절에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서 달려와 기꺼이 스페인 인민의 우군(友軍)이 되어 주었다. 비록 스페인내전은 5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내고 프랑코 군대의 승리로 끝나, 말로의 표현처럼 “정의를 실패할 수 있고, 폭력이 정신을 꺾을 수 있으며, 용기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일깨워준” 전쟁이 되었지만, 국제주의자들의 아름다운 단결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스페인 내전 시기 참전하였던 국제주의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북한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은 이젠 한국에서 제

법 유명해진 인물이다. 북한인권·민주화 관련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는, 자신이 직접 행사와 캠페인을 조직하며 홀로 뛰어다닌다. 동양적 감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의 유별난 언론 플레이나 동키호테식 돌출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의 활동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벽안의 외국인이 북한 어린이들의 사진을 들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뛰어다닐 때 동포인 우리는 북한을 위해 무엇을 했나 하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일본의 행동주의 북한민주화단체인 RENK(구출하자 북조선 민중 / 긴급행동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일본 간사이대학 교수 이영화는 재일교포 3세이며 북한에 유학한 경험을 갖고 있다. 유학시절 북한체제의 반인권성을 뼈저리게 체험한 이영화는 귀국하여 북한민주화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북한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그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대학교수로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그가 북한민주화운동이라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그를 ‘죽여도 좋은’ 공개수배자 명단에 넣어 공작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조선난민기금 사무국장 카토 히로시를 비롯한 활동가들,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라(赤旗)’ 평양특파원이었던 하기와라 료도 지금은 북한민주화를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사평론 편집장 피에르 리굴로는 한때 좌파였다가 전향하여 ‘공산주의 흑서’ 집필에 참여하였고 지금은 ‘북한인민돕기위원회’를 조직하여 유럽지역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민주화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I) 미국 지부장을 역임했고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대학살을 조사하여 지도부를 국제전범재판소에 서게 했으며 르완다 대학살의 실태를 세상에 알린 국제인권조사관이자 운동가인 데이비드 호크는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시작,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호크는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실태 조사관으로 선임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문제에 정통한 일반 학자에게 실태 조사를 맡길 경우 정치적인 배경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학살문제 전문 인권운동가인 호크에게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한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수차례 한국을 오가며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면담하여 내용을 분석했고, 북한의 특수한 용어를 영어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했으며 해당지역의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 구조를 소개하는 등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모든 것을 낱알이 공개하였다. 2004년 4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북한인권위원회, 이지스재단, 주빌리 캠페인 등 1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자유의 날’ 행사가 열려 북한인권·민주화 실현의 세계적 목소리를 한 데 모으기도 했다.

2003년 미 의회에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인 RFA와 VOA의 한국말 방송시간을 현행 2~4시간에서 24시간 종일 방송으로 확대하고, 북한 내부에 라디오 보급, 탈북자들의 미국 망

명 확대,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이 상하원에 동시 제출되었다. 이어 2004년에는 자유법안의 내용 가운데 인권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제출되었다. 2004년 3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안은 7월 21일 하원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9월 28일 일부 내용의 수정을 전제로 상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10월 4일 하원을 재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인권·민주화운동이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되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남한의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북한인권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국제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의혹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 앞에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운동권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라는 보수우익의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진보 시민운동진영이 북한인권·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배후와 의도를 따지지 말고 현실에서 운동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2004년 6월 13~15일 서울에서는 WEF(세계경제포럼)이 열렸다. 이 기간동안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전세계에서 서울로 모여들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한국의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이런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집회’를 주도했다. 시민운동단체들은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4회 세계시민사회포럼’에도 220여 명의 참가단을 파견하였고,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대규모의 참가단을 보낸 바 있다. 이렇듯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한국 시민운동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어서 할까? 북한의 인권문제에 세계의 진보적 양심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 남한의 진보적 시민운동단체가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할 당연한 아젠더 아닐까? 그런데 정작 북한문제에 주인으로 나서야 할 사람들은 무관심한데다 북한인권운동을 방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북한문제에 대한 의무감이 다소 적은 외국인들이 더욱 열심히 것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운동단체일수록, 특히 한국의 시민운동단체일수록 북한인권·민주화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민주화운동은 노력을 투하한 만큼의 성과가 즉각 보이지 않는 운동이다. 그래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현실로부터 운동을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인간과 함께 한다는 진보운동의 순리에 맞는 행동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시대이며 같은 민족인 2,300만 북한 주민들이 독재와 학정에 떨고 있다.

한국 시민운동의 북한 인권문제 무관심에 대한 고찰



1판1쇄 발행 2004년 11월 30일

1판2쇄 발행 2021년 1월 28일

발행처 자유기업원

발행인 최승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07236)

전화 02-3774-5000

팩스 0502-797-5058

※본 파일은 2004년 발행한 NGO시리즈 NO.9 『한국 시민운동의 북한
인권 문제 무관심에 대한 고찰』 책을 재편집하여 PDF로 변환한 것
입니다.

© 자유기업원, 2020

비매품